

광주·전남, '이재명 정부 100대 과제' 반영 총력전

‘국정기획위’ 출범…국정 설계 본격 AI·재생에너지·군공항이전 현안 기획위 내 호남출신 배정 ‘기대’ TF·상황실 운영 등 전방위 대응 “정무적 설득·정치권 연대 병행돼야”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지역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양 사·도는 국정기획위의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 핵심현안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따라 향후 5년의 지역 발전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공약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에 발맞춰 실·국별 과제별 TF를 가동하고, 공약별 세부 실행계획서를 취합해 국정기획위에 순차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독자적 노력에 더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전략이 병행되면서,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최근 실·국별로 세부 계획서를 정비하고,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요 공약의 국정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민·군 통합 서남권 관공공항 구축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등 7대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공약과 생활밀착형 정책을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제2차 추경을 앞두고는 △AX 실증벨리 조성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달빛철도 예타면제 추진 △5·18 역사클러스터 조성 등 국비사업 12건을 우선 추진 중이

다. 이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배달앱 운영 등 5개 과제는 추경 반영이 필요한 현안으로 분류된다.

특히 광주시의 주요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이번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국가 주도’ 방안으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갈등을 조정하겠다”며 ‘국가 주도 민·군 통합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광주시는 국정 대응을 전달할 ‘쌍둥이 상황실’도 가동했다. ‘골목경제 상황실’을 통해 정부의 비상경제 TF와 연계해 소상공인 정책을 발굴하고, ‘대선공약 서울상황실’로 국정기획위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공약의 정책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소상공인과 지방의 목소리를 키우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등 광주시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역시 지난 4일 ‘국정과제 대응 TF’를 출범, 김영록 지사가 직접 단장을 맡아 대선 공약과 도정 현안을 중심으로 총 104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TF는 현재 세부 검토를 거쳐 국정기획위 제출을 준비 중이며, 과제는 대선 공약과 정책·광역·기초 공약, 공약집에는 없으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현안까지 포함됐다.

핵심 과제로는 △솔라시도 AI에너지 신도시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AI 농산업 융복합지구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대 설립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표 과제로,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순천대·목포대 중심의 국립공공의대를 추진 중이다.

‘솔라시도 AI에너지 신도시’ 또한 국정 에너지 전환 전략과 맞물린 전남도의 핵심 과제다.

▶ 3면에 계속
오지현·정상이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1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15만~50만원 차등 검토 2차 추경 임박… 소득계층별 유력

정부가 조만간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면 차등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

학교폭력예방캠페인



다양한 실력으로
모두의 꿈을 키우는
교육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